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노동자계급을 배신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 통합진보당과 단절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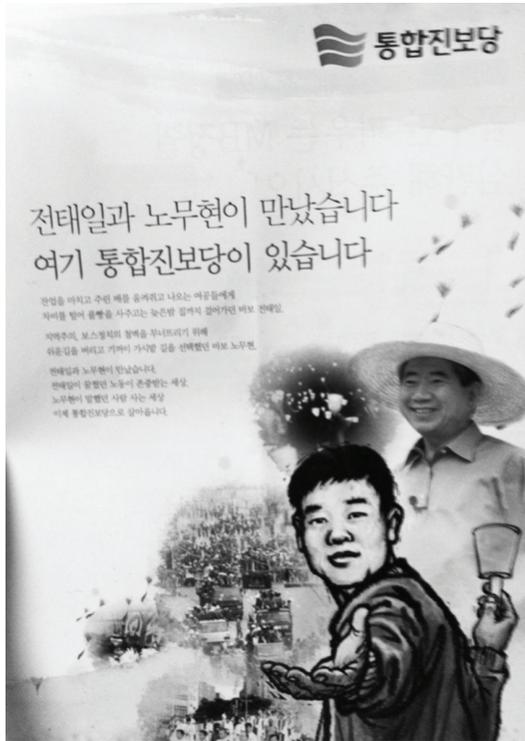
민노당, 노심조가 마침내  
자본가정당과 통합했다.

국참당의 전신이었던 참여정부 시절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위시한 모든 세력들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에 맞서, 그리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 평택 미군기지 건설, 한미 FTA체결에 맞서 투쟁을 진행하다가 죽거나 구속당하고 부상을 입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과 원샷 통합이네 아니네 하면서 민노당, 노심조 등의 국참당 통합파들은 자신들 정당의 대의원대회 결과들조차 간단히 엮어버리면서 국참당과 한배를 타고 말았다.

이들 세력들은 자본주의 천년왕국을 위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서 거간꾼 노릇을 하면서 적당히 노동자들을 압력수단으로 동원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단지 국회에 진출하거나 한자리 차지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것이다. 대체 국참당과 함께한다면 그 당시에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의 대답은 이렇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노무현 정권에 맞서 투쟁해왔다. 다만 통진당의 출세주의자들은 당시에 그렇고 지금도 노동자들 죽음의 대가로 거간꾼 노릇만 했었다.

**통진당은 민주통합당과  
반MB연합 선거연합으로  
치닫고 있다.**

개량주의 지도부의 유일한 정치적 잣대는 선거에서의 당선 여부이고,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이해 같은 것은 이미 시궁창에 내다 버린 지 오래다. 그런데 마침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불만이 높은 것을 악용해, 즉 모든 것을 반MB로 포장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본색을 감추고 있을 뿐이다. 자본가 정당과 함께 하더라도 오직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문제없다는 선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반MB 선거연합, 민주대연합은 이명



목숨을 걸고 노무현 정권에 맞서 투쟁했던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던질 수 있는가?

박정권 내내 지속된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갉아먹어 왔다. KEPCO와 현자비정규직 파업 등에서 보듯 야5당 중재단을 통해 노동자투쟁을 주저앉히고 깨뜨려 왔다.

통진당은 이제 노동 의제도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민주통합당에게 선거연합을 노골적으로 애걸하고 있다. 통진당이 선거연합을 위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민주통합당과의 정치적 차이는 자본가 정당 내부의 사소한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통진당은 벌써부터 자본가 정당들의 전유물이었고, 자신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자치단체 의회 의원들과 단체장들이 임기를 채우지도 않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식은 김밥 한 줄을 미끼로 사측과 한통속이 되어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이경훈 현대차 전 지부장도 울산 남구에서 통진당 예비후보로 준비하고 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한 번 더 통합하라거나, 사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민주통합당을 찍으라는 목소리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을 것이다. 이미 유시민은 몇 년 전에 민노당 찍으면 한나라당 당선되니깐, 열우당 찍어달라고 하

기도 했었다.

**자본가 정당에 한 푼도  
한 명도 내주는 안 된다.**

진보신당은 결코 통진당 지지 반대투쟁을 일관되게 진행할 수 없다. 진보신당의 반MB 선거연합 전술로는 결국 야권연대로 용해될 수밖에 없다. 반MB 선거심판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노동자들을 배신할 가능성이 짙게 깔려 있다. 진보신당 또한 자본가 정당과 통합한 통진당이 민주통합당과의 선거연합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2-3월까지 통진당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민주통합당과의 선거연합이 가져오는 파멸적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약삭빠른 노동자 배신자들은 이미 민주통합당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민노당과 국참당의 통합은 물론 진보신당 등이 걸고 있는 전반적인 우경화 흐름이 노동자 운동 전체를 갉아먹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식 노동조합운동 또한 정권과 자본이 자행하고 있는 노동조합 파괴 책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업장 등에서 노동자 투쟁이 수년씩 진행되는데도 조직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한번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의 우경화가 노동운동 내부에도 심각하게 침투해 들어온 결과물이다. 대부분의 노조관료들은 파업을 조직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우경화에 파열구를 내기 위한 첫 출발은 노동자들이 자본가 정당은 물론이고 자본가 정당과의 통합이나 연합에 어떠한 지지도 보내지 않고 명확히 단절하는 것이다. 반MB건 어떤 사탕발림이건 자본가 정당과 선거연합, 정책연합, 통합을 반대하고 단죄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진당과 민주대연합, 야권연대 세력들의 선거운동을 위해 한 푼의 노동조합비도 지출되어서는 안 되고, 단 한 명의 인력도 가동되어서는 안 된다.

#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운동을 다시 시작하자!

민주노총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은  
파산으로 일단락되었다.

96-97년 민주노총의 총파업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은 권영길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등 관료적 지도부들의 '국회의원이 없어서'라는 등의 핑계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열망하는 현장 조합원들의 뜻이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노동자 정치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해준 것은 총파업의 실질적 패배였다. 지역과 업종으로 조직되고 그리고 민주노총이라는 전국적 조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운동이 한계에 부딪혔다. 바로 그것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노동자 정치운동 또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운동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킨 실질적인 이유였다.

물론 민주노총이 결성되기 이전에도 노동자 정치운동이 진행됐다. 그러나 그 시기의 정치운동은 대중적 노동운동과 전면적으로 결합하지 못했으며, 다른 한편으로 자본가 정권의 극악한 탄압 때문에 힘 있게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이 웅변하듯이 당시 노동자 정치운동을 내세웠던 당사자들이 이미 그때 당시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사민주의 정치로 돌아섰으며, 그와 함께 민족주의 세력 또한 계급정치를 포기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바로 이들 세력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열망을 가로챈 결과가 오늘의 현실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양날개 전략은  
최종적으로 파산했다.

개량주의 정치세력화의 가장 큰 폐해는 정치투쟁은 당에게 맡기고 경제투쟁은 노동조합이 담당한다는 양날개론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정치는 마치 노동조합 운동과 분리된 고상한 것으로 남고 노동자들은 선거에서 표찍어 주고, 일상시기에는 정치자금 세액공제 대상으로 전략시켰다. 이러한 대리주의는 노동조합투쟁에서 정권과 자본에 맞서 정치투쟁으로 발전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노조관료들의 이해에 봉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시기에 노동조합 관료들은 개량주의 세력만이 아니라 자본가 정치인들까지 앞세워서 노동자 투쟁을 통제하고 가두는 데 동원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2009년 쌍용차 8.6 합의조차도 이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의 공장점거 파업투쟁에서 중재를 했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해고와 징계였다. 여기에서는 진보정당 국회의원들과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 금속노조 위원장과 함께 비정규 투쟁을 압박하고 파괴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어 떤 것인가? 한진외의 경우 채길용 당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어용짓에 대해 어떤 철퇴도 가지 못하면서, 희망버스 운동이 시작되고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하자 정치인들을 앞세워서 또다시 국회권고안으로 투쟁을 마무리 시켰다. 개량주의 양날개 전략은 민노당이 국참당과 함께 함으로써 자본가 정당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귀결되었으며, 더 나아가 노동자 운동까지도 쇠퇴와 몰락을 가져왔다.

민주노총의 통진당 지지  
시도는 반노동자적 행위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 평택 미군기지 건설, 한미 FTA를 체결한 자들과 함께하는 정치세력화를 노동자 정치세력화로 채색하는 민주노총의 관료적 지도부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정리해고로 잘려나가도 관료들의 일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남의일로 여겼단 말인가?

지난 15년여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처참한 몰골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반MB 선거연합으로 달려가고 있는 민주노총의 관료적 지도부의 시도는 좌절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통진당 지지 정치방침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관철시키려는 것은 자본가 계급의 앞잡이가 되려는 것에 불과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다 분신하고, 맞아 죽어간 동지들, 그리고 구속된 동지들에게 역사적인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함께해야 할 민주노총의 역할을 포기하고 거꾸로 자본가들을 위해 복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내의 통진당 지지 반대 흐름 때문에 총선 이후에 다시 정치방침을 확정하려는 꿈수도 좌절되어야 한다. 또한 오늘 대의원 대회에서 정치방침 대신에 선거방침으로 변경해서 처리하는 시도도 마땅히 저지되어야 한다.

만약 민주노총 관료적 지도부가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밀어붙인다면, 노동조합 관료들의 출세를 위한 밑바탕으로 노동조합의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노동조합 위원장 자리가 자본에 맞선 투쟁을 위한 험난한 길이 아니라 출세를 위한 통로로 자리매김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을 통진당의 배타적 지지로 묶어두고 영원히 인적, 물적으로 동원하려는 노동조합 관료들의 시도는 반노동자적 행위로 규탄되어야 마땅하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있다면 그것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으로부터의 단절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노혁추), 노동해방, 혁명적노동자당건설투쟁위원회(노건투) - 이상 가나다순